

방위산업 활성화와 국산화 개발 촉진에 부쳐……



金 永 輅

國防部 민정협력관
前 획득개발지원과장

66

방위산업은 국내 민간기업에 대한 기술파급효과로 신제품의 개발 및 양질의 제품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철강공업, 소재공업 및 기계공업 등 중공업의 개발 육성과 직결되므로 공업구조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시키고, 수출상품 구조를 중공업 중심으로 개선시켜 무역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방위산업은 본질적으로 국가를 유일한 실수요자로 하여 생산의 최종적 가치가 경제성보다는 신속성에 있으며, 비밀유지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방위산업시장이 갖는 특성과 여전히 전통적인 자유시장 원리와 큰 차이가 있다.

방위산업과 국산화 개발의 필요성

● 방위산업 발전과정

이러한 방위산업 발전 및 추진과정을 육성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반 조성 단계 ('70년대 초~중반)에서의 방위산업은 주로 기본병기의 개발 시제생산 기간으로, 후반기부터 양산체제 확립을 위한 생산기반 강화에 돌입했다고 볼수 있다.

각 품목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방위산업의 필수부문인 기본병기부문에서는 경공업 수준의 공업기반에서 출발하여 불과 4~5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양산단계의 돌입에 성공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 아니할수 없다.

그 주요 요인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양산품목이 미제(美製)병기의 모방생산에 한정되었으며, 품목별로 주종업체가 단독으로 전담한 것이 아니고 여러 관련업체가 분업화되어 개발생산하였다.

둘째, 방위산업의 출범에 앞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창설되어 방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과 협조가 잘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으며, 엄격한 품질보증이 수반되었다.

셋째, 정부가 국민투자기금, 외화대부 등의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으로 집중적인 육성책을 전개한 결과라 할수 있다.

기반 완성 단계 ('70년대 중반~'80년대 초)에서의 방위산업은 기간내에 많은 품목이 방산물자로 지정되었으며, 이는軍수요의 긴박성 외에도 국내 기술수준상의 문제와 완제품(End Item) 생산위주가 아닌 再

生, 정비 등 공정상의 구분과 구성품 및 素·副材 분야까지 육성상의 견지에서 확대 지정된데 있었다.

투자효율과 장기 수요 전망에 입각한 적정 공급규모의 판단 등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여건이긴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기반완성단계에서 병기생산의 기술수준이 정착화되었고, 나아가서는 일부 품목의 수출기반을 달성하고 중화학공업의 기술 축적을 가속화시키는 단계에까지 성장하였다.

그러나 중화학공업과의 병행투자와 방산수요의 기대, 중복투자 및 독자생산율의 저위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한 나라 국방비 예산 편성의 가장 핵심적 기준은 국가보위의 전략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에 있으며, 이 2가지 기준 위에서 고찰해야 할 사항은 재생산적 기능으로서의 투자 가치의 보존에 있다.

그러나 방위산업은 국가경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적정한 규모에서 끊임없이 육성되어야 하며, 경제불황 등 가변적 정책변화에 따라 좌우될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위생산력의 고도화는 1990년대를 향한 방위산업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자주적 무기개발을 통한 고도화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기술의 토착화 내지 고도기술능력 구축을 위해 부단한 기본병기의 성능개량을 실시하고, 핵심기술의 효율적 흡수를 통해서 독자적 무기체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한 민수산업의 기술파급을 유도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독자적인 제품개발로 수출산업화를 통한 활로를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방위산업의 경제적 기여효과—————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선진국들이 민수산업기반 위에서 출발된 것과는 달리, 정부주도 하에 방위산업이 지니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목표로 출발되었기 때문에 자본력과 기술력

기술도입 또는 연구개발 등의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도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국산화 향상을 위해 업체와 官 그리고 產·學간의 상호협력체제가 구축되어, 이들 업체가 활용할수 있는 기술정보나 자문을 보다 폭넓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업종별 장비별 기술교류를 촉진하고 연구체제 창구활용 제도화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전략국산화 대상품목을 지정하여 국산화 개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 부족한 상태하에서 과다한 투자가 불가피하게 존재하였다.

방위산업의 본격적인 투자는 방위세가 신설된 이듬해인 1976년부터 산업기지가 조성되어 본격화 되면서, 정부의 방위산업에 대한 금융지원(국민투자기금)에 힘입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정부가 1974년 이후 1985년까지 防產금융 지원 實額을 살펴보면 국민투자기금의 지원이 1974년~1980년까지 1천4백63억 원, 1981년~1985년까지 1천8백7억 원 등 총 3천2백70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보조금 총 75억 원, 방산용 시설재에 대한 관세감면 혜택이 총 5백억 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방위산업은 국내 민간기업에 대한 기술파급효과로 신제품의 개발 및 양질의 제품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항공기, 미사일, 대공레이더 등 고도의 기술수준을 요구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생산분야에 기술상의 자극을 주어 첨단 민수산업 발전에 파급효과를 줌으로써, 전반적인 산업체품의 품질 수준을 제고시키는데 획기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방위산업은 새로운 유효수요의 창출과 부가가치의 생산을 통해 경제규모를 증대시키고 있다. 즉 방위산업은 직접적으로 국민소득의 증대를 가져와 전반적인 산업제품의 유효수요를 창출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수입을 감소시켜 외자를 절감시키고 궁극적으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여 외화획득에까지 이바지하게 된다. 특히 완성병기의 수입은 재생산을 유발시키지 않지만, 국내 독자개발 생산은 전반적인 산업에 걸쳐서 제품생산을 촉진시켜 국민경제규모를 확대시켜 나가게 된다.

또한 철강공업, 소재공업 및 기계공업 등重工業의 개발 육성과 직결되므로 공업구조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시키고, 수출상품 구조를 중공업 중심으로 개선시켜 무역을 신장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위산업은 새로운 유효수요의 창출과 부가가치의 생산을 통해 경제규모를 증대시키고 있다. 즉 방위산업은 직접적으로 국민소득의 증대를 가져와 전반적인 산업제품의 유효수요를 창출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수입을 감소시켜 외자를 절감시키고 궁극적으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여 외화획득에까지 이바지하게 된다.

특히 완성병기의 수입은 재생산을 유발시키지 않지만, 국내 독자개발 생산은 전반적인 산업에 걸쳐서 제품생산을 촉진시켜 국민경제규모를 확대시켜 나가게 된다.

기술파급 효과면에서는 용접기술의 축적으로 자동차공업의 발전을 가져왔고, 정밀가공기술은 획기적인 기계공업 발전을 가져왔으

며, 도금(鍍金), 도장(塗裝)기술의 향상은 자동차공업 및 소재공업을 발전시켰다.

통신조립기술은 전자공업과 항공조립기술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특히 방산제품의 호환성 유지, 성능보장 요구는 민간기업의 품질관리능력을 향상시켜 품질보증체제를 갖추는데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방위산업의 개발효과는 국방상의 효과면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자립적인 전략적 구상이 가능하다. 즉 독립적인 무기체계의 개발을 통해 선정을 규제할수 있어, 지금까지의 對美 군사차관(FMS)에 의한 구매시 효과적인 무기체계의 선정과 완전한 대미 의존체제에서 벗어날수 있다.

둘째, 즉응능력을 확보할수 있어 장비의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보조부품을 필요에 따라 원활히 공급할수 있어 장비자체의 가동을 제고시킬수 있다.

셋째, 자국민의 체격이나 전장의 특수성(국가, 지리적 특성, 한국적 특수기후, 환경 등)을 감안하여 장비를 적절히 개선 발전시킬수 있어 用兵상의 조건을 충족시킬수 있다.

넷째, 독자적 비밀을 요하는 장비를 보유할수 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볼때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육성지원정책에 힘입어 짧은 기간동안 기본병기의 양산기반 구축과 고도 정밀무기의 개발생산단계에 이르게 됨으로써, 조기에 자주국방태세를 갖추게 되었으며 국제화 시대로의 국민주체성을 제고시키는데 큰 힘이 되었다.

●국산화 개발촉진의 필요성————

방위산업은 기본적으로 공업생산력을 기반으로 하여 출발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반조성단계에서 기계, 금융 등 관련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제품 설계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모방생산을 위주로 방산제품의 생산조달이 이루어져온 관계로, 국산화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방위생산력의 고도화는 1990년대를 향한 방위산업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방산제품의 국산화 개발 저조로 인해 외국의 기술제휴선이 조립용 중요부품을 계속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 감소는 물론 원가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산화 개발을 제고할수 있도록 하는 관련시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다.

또한 방산업계로서는 국내수요의 한계와 조달재원의 확대계약으로 방산시설의 가동율 제고 문제가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주요 방산부품의 국내개발 생산과 소요구이 필요로 하는 고도 정밀무기의 국산화율을 제고시킴으로써, 수입대체에 의한 외화절약 및 방위산업의 가동율 향상을 도모할수 있도록 방위산업의 국산화 개발 촉진을 위한 대책방안이 연구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국산화 실태와 추진계획

군의 전력증강을 위해서는 군 보유장비의 운용유지를 위한 부품 및 정비활동의 경제적이고 원활한 공급이 새로운 장비의 획득 못지 않게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대부분이 군원장비이거나 해외구매장비이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산장비도

수입부품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유지부품의 획득 및 해외정비를 위해 매년 엄청난 외화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74년 유지부품 국내개발이 시작된 이래 그동안 소요량이 많고 요구기술이 높지 않은 경제성 품목에 대하여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나, 국산화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그러나 개발실적이 극히 저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발한 품목도 매년 아주 미약한 수에 불과하여 국산화 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미진한 실정이었다.

一 笑 一 少 一 怒 一 老

대단한 아이(4)

매사에 호기심이 많은 승민이가 거울 앞에서 눈을 감고 서있는 것을 보고 엄마가 물었다.

「왜 눈을 감고 서있니?」

그러자 승민이가 대답했다.

『잠잘때 내 모습이 어떤가 궁금해서요』

또한 개발을 추진하려는 품목도 도중에 개발을 취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 이유는 소량, 소액 등 경제성 부족이 주된 원인이었으며, 기술 부족 및 제조설비 미비, 원자재 획득 불가, 개발업체의 영세성 등이 대부분이었다.

국산화 실태와 추진상의 문제점

국산화율 분석은 현재까지 분석기간별 편의성과 이용목적에 따라 개념을 달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론적인 체계가 사실상 미확립되어 있다.

국산화율은 관리의 목적과 국산화 촉진의 2가지 개념을 병행하여 산정되고 분석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리목적상의 경우는 장비가격 또는 부품가격을 기준한 산정방법이 보편화되어 있다.

부품가격기준에서 일정부품에 대한 수입시와 국내구입시와의 가격대비는 비교적 용이 하나, 장비(제품) 단위에 관련되어 있는 부품별 원가산정이 곤란할 경우 부품가격기준의 국산화율 산정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산화율 산정분석은 장비가격(生產原價 : 調達價格)을 기준으로하여 장비별 그리고 생산에 참여하는 계열업체별로 파악하여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국산화 추진상의 문제점

국산화의 활성화는 업계 및 정부의 추진 환경여건 및 제도운영이 뒷받침되고, 실용(경제적 의미에서의 희생)과 편익의 관련성을 고려한 경제원칙 및 기술진보의 과급효과 그리고 정착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어 추진해야 한다.

이에 반해 우리 방산업계는 제품의 특수성 등으로 국산화 추진 여건이 미흡하고 제도운영이 결여되어 국산화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것이 국산화 추진의 당면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산화 추진여건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는 최소 경제물량의 유지 곤란과 장기지속적인 물량 획득이 불투명하여 국산화가 활성화되지 못한데 있다.

둘째, 설비투자 과다소요 및 연구개발이 부진하고 중소기업체(협력업체)의 독자개발에 대해 모기업에서의 특허권 인정문제가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셋째, 현재 방산제품은 MIL-SPEC에 의한 품질보증의 강화로 국산화 개발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품질보증은 무기의 성능 등에서 양질의 제품생산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하겠으나, MIL-SPEC상의 국내실정을 감안한 대체규격의 접토와 규격완화 여건이 미정착되어 MIL-SPEC상의 적용 융통성이 부정되고 있으며, 外注업체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이 취약한 실정에 있는 것도 국산화 촉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국산화 추진제도 운영에서는 정부의 국산화 추진방침 및 지원 규제책이 수립되어 있기는 하나, 관련제도 및 제반규정이 미확립되어 있는 실정에 있고 생산제품의 종합소요판단이 결여되어 있다.

국산화의 촉진은 관련제도 및 제반규정의 확립으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산화 개발



대단한 아이(5)

한 마을에 영특하기로 소문난 어린이가 있었다.

이를 시샘한 옆집 할아버지가 짖궂게 농담을 했다.

『얘야, 너처럼 어린나이에 영리하면 나이가 먹어서는 바보가 된단다』

그러자 어린이가 대답했다.

『그러면, 할아버지도 제 나이면 무척 영리하셨나보죠?』

에 따른 국제수지 개선폭에 대한 Incentive제 또는 별도 보상제도가 정립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규정이 미흡하고 국산화 평가부서가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여 업체의 국산화 관련 승인 신청을 정부관련기관에서 회피하는 실정에 있다.

이에 따라 업체는 국산화 추진 및 실시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에 있을수 있고, 정부 추진계획을 능가한 개발의욕을 상실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발전의 극대화 내지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며, 연구개발에 소홀하여 자체개발능력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산화 개발 촉진 효율화 방향

● 국산화 대상품목의 선정 및 추진계획 —

국산화 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장비별 재료비에 대한 자가제작, 구입부품, 수입부품으로 구분하여, 요소중 수입에 관련한 현황분석이 1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기초하여 기초소재산업에서의 투입원료와 제품 제작에서의 수입재료 및 부품으로 분류, 이에 대한 수입의존 요인을 분석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근본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는 기초재료(원료 및 부품)와 기술수준 및 설계능력 원가 및 신규 설비투자 등의 경제적인 여러 요인과 기술전수시 수입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국산화개발의 부진은 기술수준 저위 → 수요 부족 → 경제성 미흡 → 수입의존 → 제품기술개발의 부진 등이 악순환을 이루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업체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요개발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고, 일단 수요가 확보되면 업계의 개발의욕이 자극되어 기술개발로 촉진될 수 있다.

국산화 대상품목 선정은 정밀부품 또는 핵심부품으로서의 기술파급 효과가 큰 품목, 재료비 비중이 높아 수입 대체효과가 큰 품목,

그동안 방위산업은 기술파급 효과면에서 용접기술의 축적으로 造船, 자동차공업의 발전을 가져왔고, 정밀가공기술은 획기적인 기계공업 발전을 가져왔으며, 도금(鍍金), 도장(塗裝) 기술의 향상은 자동차공업 및 소재공업을 발전시켰다. 통신조립기술은 전자공업과 항공조립기술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특히 방산제품의 호환성 유지, 성능보장 요구는 민간기업의 품질관리능력을 향상시켜 품질보증 체제를 갖추는데 획기적인 전기(轉機)가 되었다

부가가치효과가 큰 품목, 국산화 시점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선정기준의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해야 한다.

국산화 대상품목의 단계별 국산화 개발 추진계획은 1단계로 장래의 수요규모가 크고 국산화율이 낮은 제품(부품)중 재료비 비중이 큰 품목, 2단계로 장래의 수요규모가 큰 제품중 재료비 비중이 큰 부품, 3단계로 재료비 비중이 큰 부품에 대해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국산화 개발 효율화 방향 —

방위산업의 국산화 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防產의 지속성에 따른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전제로, 업계 및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인 측면과 연구개발에 대한 기술수준 그리고 기술도입 정착가능성 측면에서 기업단위의 대책과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종합하여 볼때, 국산화 개발향상을 위한 환경여건 조성과 제도 운영 수립으로 국산화를 제고할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산화의 촉진은 관련제도 및 제반규정의 확립으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산화 개발에 따른 국제수지 개선폭에 대한 Incentive제 또는 별도 보상제도가 정립되어 운영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고 국산화 평가부서가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여, 업체의 국산화 관련 승인 신청을 정부관련기관에서 회피하는 실정에 있다. 업체는 국산화 추진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에 있을수 있고, 이에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발전의 극대화 내지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며, 연구개발에 소홀하여 자체개발능력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산화 향상 환경여건의 조성에서는 국산화 향상 선별능력 제고를 위해서 사전에 기술정보를 충분히 획득하여, 필요한 기술을 도입토록 하는 것이 요망되고 있다.

이는 국내외 기술정보센타 활용 및 유관기관 유사업체 자료의 적극 활용으로 기술에 대한 소재와 기술성을 파악해야 할 것이며, 기술도입에 수반되는 원자재, 자본재 도입의 기계설비 그리고 제품의 시장성 검토를 보다 멀히 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한한 일괄도입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산화 개발의 도입 기술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술이전은 기업내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그룹간, 국내기업간, 국가간의 기업간 등이 있으나, 개별 기업은 각각의 기술이전 경로별로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내 도입기술이나 개발기술에 대한 신기술의 단계도 분화, 종합수용단계가 있으므로 경영자는 기술의 정책단계별로 그룹간 마찰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 수요의 한계와 조달재원의 확대계약으로 防產 가능을 제고가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술도입과 자체개발이 연계화되어야 하는데, 자체적인 기술개발 또는 개량의 노력이 없는 단순한 기술도입은 기술의 대외의존도만 높이게 되어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없게 된다.

특히 기술격차가 크고 기초연구가 부족한 경우에는 기술도입과 병행된 자체개발 또는 공동연구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며, 자체 기술개발 능력을 배양해서 기술면에서의 자립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산화 향상 선별능력 및 연구개발에 대한 도입기술의 활용도가 제고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경제물량 유지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경제성과 기술도입 및 연구개발 노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자료체계화 확보 등으로 국내 및 국제수요 창출을 지원하고, 업계에서도 신제품 및 부품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국산화 제도운영 수립의 정착에서는 국산화 개발촉진의 환경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수 있는 제도운영 수립이 미흡할 경우, 그 성과는 비용과 편익 등 경제원칙의 제반 여건상 기대 이하로 부진하여 국제수지의 개선노력면에서 낮은 수준으로 작용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현재 정부의 국산화 추진방침에서는 국산화 추진 달성을 원가보상 개념으로 이윤율 3%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도운영상의 제반 규정이 미정착되어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한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제도의 좋은 예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국산화 제도 및 제반규정의 수립 정착률을 국가적 차원에서 국산화 개발에 따른 국제수지 개선폭에 대해 일정 기간 원가로 보상(국산화 당시의 수입가격 적용)하거나, 별도 보상방법을 수립 운영하여 국산화의 활성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입되는 부품이나 원자재 가운데는 개발가능성이 있으나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아 수입에 의존한다던가 국내에서 개발되어

있으면서 국산화 추진과 수입추천 업무가 연계화되지 못하여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

현행 국산화 제도의 제반 규정이 미흡하여, 특히 국산화 추진 및 실시에 있어 업체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여기에서 심의되어 국산화개발로 평가되면, 어떠한 경우라도 제도(Incentive 개념의 보상 또는 국산화당시의 일정기간 수입가격 적용)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산화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심의회 기능은 국산화 여부에 대한 분석 평가 및 결정을 하고, 국산화 심의를 위한 여러 제도를 발전시키는 일을 담당해 주어야 한다.

심의회 성격 및 구성은 非常設 심의평가위원회로 하며 정부 관련기관 그리고 업계 및 연구소 등의 전문가와 전문연구요원으로 구성(위원장, 심의위원 및 간사)되어야 하며, 조치로서는 국산화 심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국산화 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도록 관계 법령에 규정해야 한다.

운영방법에서도 업체로부터 국산화 관련자료를 접수(幹事담당)하고, 분기별 또는 매월 일정기간 평가심의회를 소집하여 관련자료를 분석 및 평가 정리하여 결정하며, 결정된 결과에 대해 국산화 관련제도에 반영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술도입 또는 연구개발 등의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도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때, 국산화 향상을 위해 업체와 官 그리고 產·學간의 상호협력체제가 구축되어, 이들 업체가 활용할수 있는 기술정보나 자문을 보다 폭넓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업종별 장비별 기술교류를 촉진하여 연구체제 창구활용 제도화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전략국산화 대상품목을 지정하여 국산화 개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